

탄소배출권거래소 빛가람도시 유치 추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광주시·전남도·전력거래소 유치추진위 회의

“감축량 시스템 갖춘 전력거래소내 개설해야”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전력거래소는 18일 전남도의회 회의실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유치 추진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인 빛가람도시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유치 추진위는 의회를 비롯해 경제·학계·언론·금융·산업계·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됐다.

국무총리실에서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주무 관청 등을 명시해 7월 중 입법에 고려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령과 관련된 중앙 부처 동향과 그동안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선진국에서도 배출량의 30% 거래량의 60~70%가 발전 사업과 관계돼 세계 주요 7대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출판거래소 중 4개소가 전력거래소에서 배출권 거래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독자적 탄소시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의무대상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문기관(전력거래소)에서 우선 일정 기간 관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전문가들은 “탄소배출권 거래는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배출권 거래와 감축량 검증 시스템 등이 설립된 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주무 관청을 지식경제부로 하고 전력거래소 내에 배출권 거래소를 개설,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광주와 전남이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온실가스 흡수원이 전국 최다여서 배출권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될 것이라는 강점을 집중 부각시켜 왔다.

특히 광양제철과 여수석유화학단지 내 에너지 다소비업체 등 대상기업이 집적돼 있는 데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소재한 혁신도시로의 유치를 적극 건의해 왔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2008년 9월 전력거래소와 나주혁신도시에 공동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국제 섬포지움 개최와 배출권 모의거래 등의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펴왔다.

/정필기자 bungy@kwangju.co.kr

신안 도초 명품소금
450g이 4만5000원

신안 도초 소금이 450g에 4만5000원에 백화점에서 판매된다. 대상은 18일 전일업인 ‘신안섬보배 소금의 芸’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바닷물이 증발될 때 수면으로 떠오르는 극소량의 소금 입자를 모아 만든 ‘쁜소금’으로, 신안 도초에서 생산됐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 제품은 명품 소금인 프랑스의 ‘캐랑드 소금’ 보다 낫다. 냉장고 함량은 낮고 마그네슘, 칼륨 등의 무기질 함량이 최대 4배 가량 높은 명품 소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장·의회의장 민생현안 대책회의’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신안 연안해역
해파리 경계경보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노무라임 깃해파리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신안군 연안해역에 해파리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해파리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해파리 제거 작업과 함께 경고 발령 이후 어구가 망가지는 등의 어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신안군에 출현한 노무라임깃해파리는 현재 직경 40cm 전후이나 직경 1m 이상 대형으로 성장하는 해파리다. 지난 2009년도에 국내에 나타나 어업피해를 일으키고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쏘이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국 103개 지자체, 광주시 정책 벤치마킹 한다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전국 103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주시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해 행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주당 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지방의회의장단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경제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지방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 전환 ▲SSM(기업형 수퍼마켓) 휴일 영업제한 지속 시행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

▲골목상권 살리기 자금 지원 등 5대 민생정책을 제시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광주시가 이미 조례제정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골목상권 살리기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시책은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전국 103개 지자체가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또 0~2세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지방정부와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붙이고 생색만 내는 무능·무책임·무원칙한 정부의 행태, 그리고 기라성 같은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평가 받는 현실 등도 불사사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의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지금 시국은 도자히 이해할 수 없는 ‘4대 불가사의 정국’”이라며 “민생경제, 남북관계, 민주주의를 모두 후퇴

시킨 새누리당 정당지도가 1위이고 5·16 쿠데타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변하는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 고공 행진 등이 그 것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0~2세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지방정부와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붙이고 생색만 내는 무능·무책임·무원칙한 정부의 행태, 그리고 기라성 같은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평가 받는 현실 등도 불사사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수당 높은 U대회 조직위 가고싶다”

광주시 6급이하 인사 앞두고 수백명 파견 희망

광주시의 6급 이하 전보 인사를 앞두고 공무원들 사이에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이하 U대회 조직위)로 자리를 옮기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관 파견 수당이 지급되는데다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국제행사를 경험할 수 있다

는 장점 때문에 U대회 조직위가

때 아닌 인기를 끌면서 ‘상종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6급

이하 전보 인사를 앞두고 6급 이하

공무원 수백 명이 U대회 조직위로

의 전보 인사를 희망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U대회 조직위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기관 파견 수당으로 월 40만~5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특히 U대회 조직위원회가 광주

시청 인근인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어 다른 기관 파견과 출퇴근이 쉬운데 국제행사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5급 이

상 간부들은 조직위 파견을 ‘좌천’

으로 받아들여 선호하지 않는 데 반해 연령대가 주로 30~40대인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수당에 민감하고 국제 체육행사 경험 등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하위직 공무원들이 앞다퉈 U대회 조직위를 선호함에 따라 인사부서에는 민원도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사부서는 행정직은 하반기 승진자의 U대회 조직위 전보 불가 등 가이드라인까지 정했다.

시 관계자는 “적절한 기준을 정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전보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반발 커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 강행

국회청문보고서 채택 무산…青 “지명철회 계획 없다”

광주 인권단체 오늘 사퇴·연임철회 촉구 기자회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최종심판인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적격’ 입장과 민주당의 ‘부적격’ 입장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부적격’ 입장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운영위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운영위 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1차 시한(7월 15일)

을 넘긴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재

송부를 요청하면서 2차 시한으로 제

시한 7월 18일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명박 대통

령은 19일부터 별도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 임명동의의 대상이 아니어서 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명 철

회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직무 수행에 결정적 하자는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기류”라고 전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특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도덕성과 자질 시비에 휘말렸다.

이와 관련, 광주 인권단체인 ‘광주 인권회의’는 19일 오후 광주 동구 대인동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1층 입구에서 현 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광주인권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 후보자의 연임을 철회해줄 것을 청와대에 희망하며, 현 후보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증정해 자진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이파 파손’ 가거도 방파제 긴급복구 완료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8일 “지난해 태풍 ‘무이파’로

부서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방파제 응급 복구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근 해역에 있던 64t짜리 테트라포드(TTP) 837개, 10t짜리 482개를

방파제로 가져와 다시 설치했고 기초 사석 4883㎥, 상부 콘크리트 1358㎥를 투입해 전체 방파제 480m 가운데 피해가 심각한 220m를 손봤다.

공사는 33억원. 장기적인 복구

는 다음 달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9월 공사 발주해 2018년 완공 예정이다.

이 장기 복구는 대형 태풍 등에도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1만t급 대형 케이슨(사각 콘크리트 블록)과 10t

급 TTP 등을 시설한다.

어업관리단 관계자는 “현재 50년

빈도의 태풍에 방파제가 견딜 수 있는 높이인 설계(8.3m)를 12m

로 올리는 이 공사는 끝나면 100년

빈도의 재해에도 견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공형어린이집

내년 1500개소로 확대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이 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월 운영비로 96만원에서 824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공공형어린이집을 현재 665개소에서 내년에 최대 15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한 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공공형어린이집을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여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lobal Top Green & Smart Energy Pioneer”

첨단 2단계 전력공급을 위한 전선관 매설공사 안내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전선관 매설로 도로굴착 공사를 시행 합니다. 공사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 공사목적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지역 전력공급용 관로건설
2. 공사기간 : 2012년 7월 ~ 2012년 11월 (4개월)
3. 공사구간 : 일곡지구 한전변전소 앞 ~ 연제동 현대아파트 앞

